

2022년 양회 분석

2022.03.11.

▷▶ 정부업무보고 요약

1. 정치 분야: 당대회를 위한 초석 다지기
2. 외교 분야: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포석
3. 경제 분야: 경기부양과 소비육성
4. 사회 분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안정화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 요약

1. 2021년 성과 평가

- 국내총생산(GDP) 8.1% 성장
- 1인당 가처분소득 8.1% 증가
- 도시 신규 취업자 1,269만 명
- 신규 감세 및 비용절감 1조 위안 달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85% 달성

2. 올해 주요 목표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5.5% 안팎
-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 도시 조사 실업률 5.5% 이내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 약 3%

3. 2022년 분야별 중점 사업

- 중앙재정: 올해 재정적자율 2.8%로 작년 대비 소폭 하락 기조
- 지방재정: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지급 규모 약 1조 5,000억 위안 증가하여 총 9조 8,000억 위안 예상 (18% 증가로 근년 내 최고치) 지방정부 특별채권 3억 6,500만 위안
- 감세: 올해 세금 환급 및 인하 규모 총 2조 5,000억 위안 예상
- 취업: 실업보험기금 중 1,000억 위안을 활용, 일자리 안정·직업교육
- 정부 거버넌스: '성(省) 간 일괄처리' 범위 확대, 전자증명서 상호인증제
- 소비: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지원, 농촌지역 가전제품 소비 지원
- 혁신: 기초연구 10년 계획 시행, <과학기술체제개혁 3년 돌파방안>
- 개방: 더 많은 국가 및 지역과 고표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향촌진흥: 빈곤퇴치 지역 특색산업 발전 지원
- 교육: 의무교육 단계 부담 감소 사업 지속
- 의료보험: 주민 의료보험과 기본 공중보건서비스 경비 상향조정
- 사회보장: 세 자녀 출산정책 관련 방안 보완, 보혜성 탁아 서비스 발전
- 주택: 장기 임대주택 시장 가속화 발전, 보장성 주택 건설 추진
- 홍콩·마카오·타이완: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지원, '타이완 독립' 분열 행위 결사 반대

1 정치 분야: 당대회를 위한 초석 다지기

올해 양해 정치분야에서 크게 주목받은 이슈는 없었고 눈에 띄는 인사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기존 관행에 기초해서 안정되고 질서 있게 관련 정치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총평할 수 있다. 매우 관행에 충실했고 회의 틀이나 내용에서 뚜렷한 새로움은 발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행에서 포착해낼 수 있는 몇 가지 미세한 변화를 볼 수 있다. 그 어느 대회보다 언론 취재에 응대하는 정례 브리핑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회의 기간 시진핑 주석의 대표단 심의회 참석 발언, 그리고 이른바 ‘부장 통로(部長通道)’로 불린 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중국은 국내외 메시지 발신을 통해 중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한층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필연의 길’ 과 민족공동체 의식

우선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대 개막 첫날 네이명구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여 당과 국가, 당원과 국민이 나아갈 방향을 다섯 가지 ‘필연의 길(必由之路)’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원과 국민의 인식을 당 주변으로 단단히 묶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다섯 가지 ‘필연의 길’은 바로 ▲당의 전면적인 영도 견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단결과 분투 ▲신발전이념 관철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 등이다. 당을 중심으로 단결을 재차 강조하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로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할 것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민족 문제가 대립이나 갈등으로 비화하는 발화점이 중국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관련 인권 문제 등은 외부세계에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족 간 결속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의법치군’ 과 국방비

이러한 중국의 강경한 의지의 발현은 시진핑 주석의 해방군과 무장 경찰부대 대표단 심의회에서도 ‘의법치군(依法治軍)’에 따른 강군목표 실현을 위한 국방과 군대 건설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이른바 강군사업 추진의 강력한 법적 뒷받침 제공으로 이어졌다. 강군사업을 다그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3월 9일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국방비 예산을 전년 대비 7.1% 높여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중국은 국방비를 매년 정부예산에 넣어 편제하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미국 등 군사 대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데 따른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업무보고〉와 시진핑의 권위

리커창 총리도 연례 〈정부업무보고〉라는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중국 정부의 2022년 정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업무보고〉는 2021년 사업회고, 2022년 경제사회발전 총체 요구와 정책 방향, 2022년 정부 사업 임무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보고〉 틀은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고〉 내용 또한 ▲2021년 정세 평가 ▲2021년 사업 성과 ▲2022년 목표 ▲2022년 주요 사업 등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사실상 기존 〈보고〉와 같았다. 2021년 정세 평가에서 “정세가 복잡하고 엄중하며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하면서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단결과 전당 전국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하여 시진핑 주석의 높은 권위를 다시 드러냈다.

과학기술과 게임체인저

‘부장 통로’를 활용한 미디어 활용에서 과학기술부 부장과 공업정보화부 부장의 인터뷰가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주무 책임자인 동시에 미래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방향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왕즈강(王志剛) 과학기술부 부장은 “기초 연구와 첨단기술 탐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샤오야칭(肖亞慶)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핵심기술 공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이동통신기술(6G)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게임체인저로서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서 중국의 적극적으로 국가 자원을 동원하여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이른바 ‘기술 굴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차 당대회를 앞둔 폭풍전야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양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각급 인대와 지방 각급 정부조직법 개정, 14대 대표 정원 조정과 선거 문제에 관한 결정, 홍콩과 마카오의 14기 대표 선출 초안 등에서 몇 가지 토론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외 엄혹한 정세와 비교해서 주목이 덜했다. 관례대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회 기간 중요 인사(人事)가 없었다는 점도 이번 양회가 조용히 지나갔다는 것을 방증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도 양회가 5월에 열린 것을 제외하면 다시 3월 개최로 돌아왔다. 제도적인 틀은 그대로 반복되었고, 단지 내용에서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었지만 그 변화라는 것도 조용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떠들썩하지 않았다. 즉, 이번 양회는 정치적 쟁점이 두드러지지 않은 가운데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20차 당대회이다. 양회를 마치고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정치가 소환될 것이다.

2

외교 분야: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포석

이번 2022년 양회에서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특색 대국외교의 지속

우선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간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평가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릭스 정상회담, 중국-아세안 대화 수립 30주년 기념 정상회의,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장관급 회의 개막식, 동아시아협력 정상회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의 중요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중요한 외교 행사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추진,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및 건설 참여, 국제방역 협력 추진, 글로벌 이슈와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등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총체방략’ 의 제기

이번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인 왕양의 보고에서는 대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반면 리커창 총리의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입장(하나의 중국원칙과 92 컨센서스)을 재천명하고, 반독(反獨)-촉통(促統)-촉융(促融)을 주장했으며, 외국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새롭게 언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시대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총체방략(新时代党解决台湾问题总体方略)”이다. 이 ‘총체방략’은 작년 11월 19기 6중전회에서 이미 제기된 것인데 그 명확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양안문제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관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내적으로는 대만과의 통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완성(두번째 100년의 완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구조 하에서 두 강대국에게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상태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총체방략은 곧 총체적인 정층 설계를 통해 전방위적인 대만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전선전술 방면, 외사 방면, 대만 정책 방면, 군사 방면, 안보 방면 등에서 총체적인 구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총체방략의 사유 및 프레임은 작년 7월 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시진핑 총서기의 발언에 기반하고 있고, 11월 19기 6중전회의 제3차 역사결의, 1월 중공중앙대대만 공작회의, 3월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일련의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가을에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완결성을 갖는 총체방략이 제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하여 리커창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양안 동포들에게 “민족 부흥의 영광스러운 위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호소했다. 대만 측 대륙위원회는 이에 대해 베이징 당국이 “국민의 진정한 민생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민의를 감시하고 억압하지 않고 존중하며, 국제 규범과 질서를 해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회답했다. 중국 당국이 이른바 “대만 문제 해결” 을 재확인한 데 대해 대만 측 대륙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중화민국은 주권국가이며 대만 민의는 중국이 강요하는 정치 프레임, 군사적 위협, 외교적 탄압에 단호히 반대한다.” 고 강조하며, “어떤 정책 담론과 이론 설계, 일방적인 법률 제정, 통일전선전술 조작이 모두 헛수고가 될 것” 이라고 대응했다.

국방비 증액

국방예산 분야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7.1%를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가 전국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1% 늘어난 1조4천504억1천만 위안(한화 약 279조원)으로 설정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6.6% 증액과 2021년 6.8% 증액에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7.1%를 증액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예산을 소폭이나마 증액한 것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행보에 대응하고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딜레마

외교 분야와 관련하여 왕이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 내용은 중국의 대외 인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왕이 외교부장은 제13기 전국인대 5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안보는 나눌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으로 당사국의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지역의 장기적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균형 잡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이는 현재 국제사회는 평화를 권유하고 대화를 촉진하면서,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평화를 권유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데 일조했으며 모든 당사자와 긴밀히 소통했다는 것이다. 분쟁 이틀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루 빨리 평화회담을 하길 희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계속해서 평화를 설득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으며 필요할 때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정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3 경제 분야: 경기부양과 소비육성

2022년 양회 경제 분야의 키워드는 ‘경기부양’ 과 ‘소비육성’ 이다. 이미 중국정부는 연말부터 경기부양 시그널을 보내 왔고 이번 양회에서도 부양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선포하였다. 제작년에 제시된 중국의 장기 발전전략은 ‘쌍순환’ 전략이다. 내수위주 발전과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은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과 대내적으로는 ‘공동부유’ 라는 두 가지 조치를 거쳐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진다. 장기 발전전략의 추진과제 중 이번 양회에서 주로 부각되는 정책은 소비시장 육성 정책이며 이는 ‘경기부양’ 목표와도 정확히 상통하는 부분이다.

부양의지의 표출: 완화적 통화정책, 안정적 재정정책

매년 양회 거시정책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는 올해 중국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이다. 2022년 양회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5.5%로 제시되었다. 작년 하반기 공동부유 등 정책이슈와 전력난, 코로나 락다운 등 변수가 겹치며 경기둔화가 시현되었고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경색 움직임 속에서 중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되던 8.5%에 못미치는 8.1%를 기록했다. 커지는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중국 정부는 연말부터 부양 의지를 내보여 왔다. 2021년 12월에는 지급준비율을 0.5% 인하하고 대출우대금리(LPR)도 12월과 1월 연속으로 인하한 데 이어, 1월에는 2020년 4월 이후 21개월 만에 시중 은행에 공급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95%에서 2.85%로 0.1%포인트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올해 성장률을 5.5%로 예측하였는데, 시중기관 컨센서스가 5.0% 정도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시장에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주요 금융기관의 2022년 중국 GDP 성장률 예상

기관	노무라 증권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모건스탠리
예상치	4.3%	4.3%	5.0%	5.5%

* 모건스탠리 제외한 기관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수치

재정정책은 정태적으로는 확장기조에 속하고 있지만 동태적으로는 안정화 경향이 관찰된다. GDP 대비 재정적자율 2.8%는 전년의 3.2%에 비해 더 보수적으로 설정된 목표로서 3년 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한 수치이다(2018년 2.6%, 2019년 2.8%, 2020년 3.6%). 그러나 중앙재정정책의 안정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문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국 거시정책의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지급을 전년 대비 18% 확대하고 현(縣)급 정부 등 하급단위 정부로의 자금 직달을 당부하는 등 지방재정위기를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관찰되고 있다. 또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

행 규모 역시 3.65조 위안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코로나 경제위기 시기와 유사한 규모여서 지방정부 재정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헝다 사태로 상정되는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 원천인 공공토지 매각 대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구조적 재정난이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장기 발전전략 과제: 소비시장 육성

거시정책 목표가 전체적으로 부양기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장기 발전전략인 ‘쌍순환’ 전략의 지속 추진이 드러나고 있다. 쌍순환 전략의 핵심인 내수확대와 고부가가치 중 2022년 양회의 주안점은 소비시장의 본격적 확대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경기부양 기조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소비시장 확대는 ①소비 자체를 자극하는 경로와 ②농촌과 3선 이하 도시 등 저발전 지역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의 경로로 나뉜다.

먼저, 소비 자극과 회복을 직접 겨냥하는 정책의 대전제는 ‘주민소득 증가 및 소득분배 제도 보완’이다. 소득 제고 문제는 정부업무보고와 회견 등에서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온·오프라인 융합 소비, 서비스 부문 소비 강화, 혁신적 소비모델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신에너지 차량 구매 보조, 향촌지역 녹색 스마트 가전 보조금(家電下鄉) 및 중고가전 교환(以舊換新) 등 조치를 통해 신산업 혁신과 소비 진작이 결합되는 방안을 채택한 것도 눈에 띈다. 그 외에도 민생성 대출 확대와 숙박, 소매, 교통운수 등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코로나 경기둔화로부터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한편 신규 수요 창출 방면은 중국 정부가 장기 추진해 온 도시농촌 및 연해내륙 불균형 해소와 결부되어 있다.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강아오 등 기존에 추진하던 핵심발전지역에 지속 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클러스터화와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겨냥한 정책이 중심에 있고, 중부 및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연계발전 전략, 산업시설 이전 등이 적시되었다. 빈곤퇴치는 2020년과 2021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100년 목표’ 달성의 바로미터로 설정되어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되었는데, 그 후속 작업 격으로 빈곤탈출지역으로의 특화산업 이전, 해당 지역 농민들에 대한 직업훈련 및 농업기술 보급 등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 지역 수준에서 양로 및 탁아 시설(보혜성 유치원 등)의 확충과 가사서비스업 확대 등도 지방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간기업 중심 경제 운용

작년에 이어 올 양회에서도 ‘시장주체(기업)’를 경제 운용의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세정책이 확대되고, 증치세 부담 감소와 과

세표준 조정, 공제 및 환급제도 개선, 등 민간의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각된다. 또 민간기업 혁신, 기업가 정신 고취, 기업의견 수렴 등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활력을 늘리는 제안들과, 기업 재산권 보호와 자주 경영권 보장 등 실질적 정책들이 동반되었다. 반면 ‘공급측 구조개혁’ 기조는 꾸준히 지속되어 국유기업 구조조정 가속과 국유자산 감독 강화 등의 국유부문 개혁이 천명되어 민간기업 활성화와 대조를 이룬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력이 고용안정으로 이어지길 당부하며 전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이 경기부양 기조의 주력임을 방증하고 있다.

시장개방 지속 추진

정부업무보고는 다자 및 양자간 통상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하며 시장개방을 가속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관련하여 정부는 RCEP체제 하에서의 관세특혜와 원산지 규정 등 정보비용 감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외국환서비스 및 수출금융 확대, 증치세 환급제도 간소화 등 금융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그 주요한 수혜자는 기업들인바, 상술한 민간기업 활력개선과도 맞아떨어진다. 외국인투자(FDI)에 있어서도 2019년부터 본격 시행중인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더 철저히 시행하여 장려 업종을 확대하기로 해 외자유치에 더욱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조단계와 R&D 방면 FDI와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지역에 대한 FDI 지원방침도 밝히며 FDI 유치가 단지 양적 측면에서의 접근만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전략에 직접 기여하는 대외경제정책 영역임을 다시금 확실히 하였다. 그 외에도 자유무역시험구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시범형 개방 프로젝트도 제시하여 향후 개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암시를 남겼다.

4 사회 분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안정화

사회 안정 최우선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중국은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를 통해 체제 우월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올 가을 20차 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엄격한 방역조치로 인해 해외로의 인적 이동과 국가 간 왕래가 제한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침체, 규제 강화로 인한 민간기업과 사교육 시장의 불안 등 다양한 불안정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민생은 ‘가장 큰 정치적 이슈’로, 민생이 안정되어야 민심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된다. 양회는 20차 당대회의 사전 포석이다. 양회에서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사회를 안정화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바이두에서 발표한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 2022년 전국 양회 빅데이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향촌진흥’, ‘교육개혁’이 실시간 검색어의 1~3위를 차지했다. 그 중 ‘사회보장제도’와 ‘교육개혁’은 중국 대중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회 이슈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자녀정책 지원조치, 의료보험, 퇴직정책, 노후서비스, 일자리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세자녀정책 지원조치, 퇴직정책, 노후서비스

2021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062만명으로, 전체 인구수는 전년 대비 겨우 48만명 증가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여러 차례 인구정책을 조정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출산 지원정책이 주로 ‘초과 출산 처벌’ 감면과 의료와 보육환경의 개선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작 가계에 필요한 ‘확실한 복지’는 거의 공백이었기 때문이다. 출산, 퇴직, 노후문제는 ‘중국 인구문제’의 순환고리로, 노동력과 사회적 부양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그 중 한 고리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사회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올해 양회에서는 ‘양로와 보육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2022년의 중점 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1) 양질의 양로 및 보육기관의 수를 증가하고 2) 서비스의 가격 합리성, 편의성, 접근성을 보장하며 3)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향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의미한다.

일자리 정책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유연 취업이 많은 이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다. 과거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했던 부동산, 과학기술, 교육 등 산업이 2021년의 규제폭풍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2021년 중국의 유연 취업 인력이 2억 명에 달했다. 2021년 기준, 61%의 중국 기업이 유연고용을 선택했으며, 유연 고용인력 규모를 확대한 기업은 20

20년의 29.3%에서 2021년의 51.8%로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49.7%)을 유연고용의 주목적으로 꼽았지만, 유연취업자의 경우 가계부담(52.4%)과 일자리 부족(34.7%)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노동시장의 심각한 수준의 ‘수동성’을 보여준다. 2022년 중국 대학 졸업 예정자가 10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향후 청년층의 취업경쟁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개혁

중국이 2021년 발표한 ‘쌍감’ 정책은 초·중교 학생들의 수업부담과 학부모의 교육 불안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오히려 오랫동안 사교육에 ‘의존’ 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쌍감’ 이슈는 교육개혁의 가장 큰 화두이다. 올해 양회에서 ‘아이의 학습 흥미를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쌍감’의 목적과 의미, ‘비교과목 교육반 신청’ 등이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집단’과 ‘학제개혁’도 교육개혁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전국 ‘쌍감’ 효과 조사보고>에 따르면, ‘쌍감’ 정책 발표 이후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주 50시간을 초과했으며, 부수적인 정책과 업무 수행으로 인해 수업의 질을 향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향후 제도적으로 교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이외에, 방과후 활동 수당을 높이고, 교사의 방과후 활동참여를 승진, 표창, 성과급 배분의 참고기준에 포함시키며, 초중등학교에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학제개혁’에서는 ‘일반고등학교-직업고등학교 분리정책’ (의무교육 이후, 일반고교와 직업고교의 학생모집 비율을 대체로 1:1로 유지하는 정책)이 재논의되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고교-직업 고교 분리’ 정책의 합리성이 질의 받고 있다. 기존의 정책은 사실상 대학입시의 부담을 중학교로 일부 하방한 것으로, 학부모들의 교육 불안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전환은 종합적 소양을 갖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생들을 일반고교와 직업고교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의 인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일반고등학교 진학 비율을 조정하고, 일반-직업고교의 차이를 없애고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청년들이 최고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중국 노동시장의 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SICS)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509호

소장실: 02-740-1650 / 연구교수실: 02-740-1651~4 / 대표전화: 02-740-1654

대표메일: sics@skku.edu / 홈페이지: <http://sics.skku.edu>

Copyright 2013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All rights reserved.